

주사를 두려워 하자

이기수/국민일보 기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겐 병원에 가면 으레 주사를 맞는 것이라고 하는 병원=주사의 등식이 신념처럼 존재하는 것 같다.

병원에 가보면 막무가내로 울어대는 어린이에게 억지로 주사를 맞히는 광경을 흔히 대한다.

어디가 불편해서 병원에 왔느냐고 물으면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왔다고 대답하는 환자들도 많이 있다.

실제로 어떤 조사에 의하면 감기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의 93%가 주사를 맞는다고 한다.

과연 주사는 이만큼 흔히 써야 할 정도로 꼭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많은 병원에서 경구투약만으로 충분히 치료효과가 달성될 수 있는 질환에 불필요하게 주사제가 혼용되고 있다는 것이 다수 의사들의 견해다.

Y씨는 서울 근교의 베드타운으로 소문난 P사에서 7년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업하고 있는 소아과전문의, 유명대학 병원의 임상교수였던 그는 불혹의 나이를 훨씬 넘겨 뒤늦게 독립을 한 탓인지 빨리 자리를 잡아야겠다는 조급한 마음

과 인술사이에서 늘 방황하고 있다고 솔직히 털어놓는다.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될 환자가 주사를 놔달라고 떼를 쓰면 『주사라고 다 좋은 줄 알아요? 주사맞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런 환자들일수록 대개 주사를 맹신하고 있고 병원은 주사맞는 곳이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 주사를 쓰지 않으면 「주사도 안짜주고 돈떼먹는 도둑놈」쯤으로 치부해 받을 끊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Y씨의 설명에 따르면 병원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는 촌각을 다투는 급한 상황이 아닐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구투약만으로 치료 가능하다. 실제로 사용되는 주사제에 대해 대증요법을 위한 것으로 작용시간이 길지 않다. 약효는 빨리 나타나지만 실제 효과는 그리 오래 끌지 못한다.

주사는 약물투여의 한 수단일 뿐이지 결코 모든 경우에 가장 우월한 약물투여 방법은 아니다.

오히려 주사에 의한 약물투여는 경구투약에 비해 부작용의 정도가 심하여 주

사부위의 국소농양, 신경마비, 그리고 과민반응에 의한 쇼크사 등 위중한 부작용들이 먹는 약에 비해 훨씬 많이 보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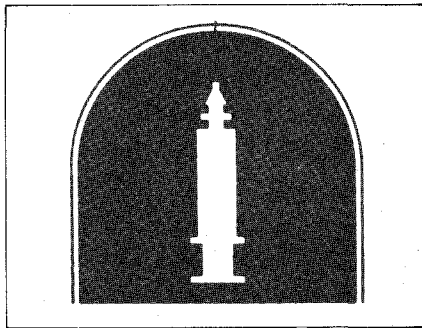
그 뿐만이 아니다. 투약의 편의성도 낮고 비용역시 많이 든다. 이 때문에 주사의 사용은 다른 방법에 의한 투약이 어렵거나 특별한 적응증이 있을 때만 선택돼야 한다.

그런데도 이처럼 주사가 많이 쓰이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그 첫째 이유는 환자들의 주사에 대한 그릇된 인식 때문일 것이고 둘째는 행위별 수가를 토대로 한 현행 진료비 지불방식이라는 의료제도적인 모순과 Y씨처럼 의사들이 우리사회와 쉽게 타협해버리는 탓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 우리의 이웃들은 '병원에 가면 주사를 맞는 것이 좋겠다' '주사를 맞으면 병이 빨리 치료된다' '먹는 약으로 잘 안 나을 병에는 주사를 맞아야 한다' 심지어 '심하게 아플수록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등 비합리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의료정책과 의사들의 책임도 크다. 즉 현행 우리나라 진료비지불제도는 진



“ 많은 병원에서 경구투약만으로 충분히 치료효과가 달성될 수 있는 질환에 불필요하게 주사제가 혼용되고 있다는 것이 다수 의사들의 견해다.”

료행위의 가짓수에 비례해서만 의사들의 수익이 결정된다.

환자에 대한 설명과 설득에 대해서는 충분한 전문가비용이 지불되지 않고 주사를 사용했는지, 수술을 했는지, 또는 경구용 약만 투여했는지 등 기계적인 진료행위의 종류에 따라 값이 매겨진다.

이런 제도 아래에서는 의사들이 주사에 대한 환자들의 그릇된 인식이나 높은 주사 선호성향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가 어렵다. 하다못해 맹물이라도 주사해서 자신의 진료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므로써 환자와의 관계를 잘 유지시키고 싶은 심정이 될 것은 뻔하다.

게다가 주사행위에 따른 진료비가 추가되므로 그야말로 '핑먹고 알먹기'이니겠는가.

불필요한 주사의 사용은 약물의 오남용을 야기시키고 위험한 부작용의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료비지출의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란 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과제다.

의사와 환자 모두 이제부터라도 주사를 두려워 하자. 우선 주사부터 놓고 보자거나 무조건 주사를 맞아야겠다는 그릇된 시류를 바로 잡기 위한 대국민 보건계몽교육과 포괄수가제검토 등 제도개선노력도 시급하다고 본다. †